

국내 곰 사육, 2026년부터 중단

1981년부터 응답 채취 위한 사적 이용...국가 위상 맞게 '멸종위기종 보호' 역할

지난 1981년부터 시작된 곰 사육이 오는 2026년부터 중단된다.

환경부는 사육곰협회를 비롯한 동물자유연대 등 4개 시민단체, 구례군, 서천군 등과 함께 2026년부터 국내 곰 사육 종식을 선언하고 관련 협약을 20일 체결했다.

2025년까지 참여 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사육곰 보호 및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2026년부터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해 정부가 인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곰 사육 종식을 법제화하기 위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을 금지하고 환경부와 구례군, 서천군 등은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육 농가는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곰을 관리하되 시민단체는 후원·모금을 통해 곰을 보호시설로 이송 협력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사육곰 증식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강화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육곰이 사유재산인 점을 고려해 정부 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며 "곰 사육 종식 선언은 우리나라 국가 위상에 맞게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에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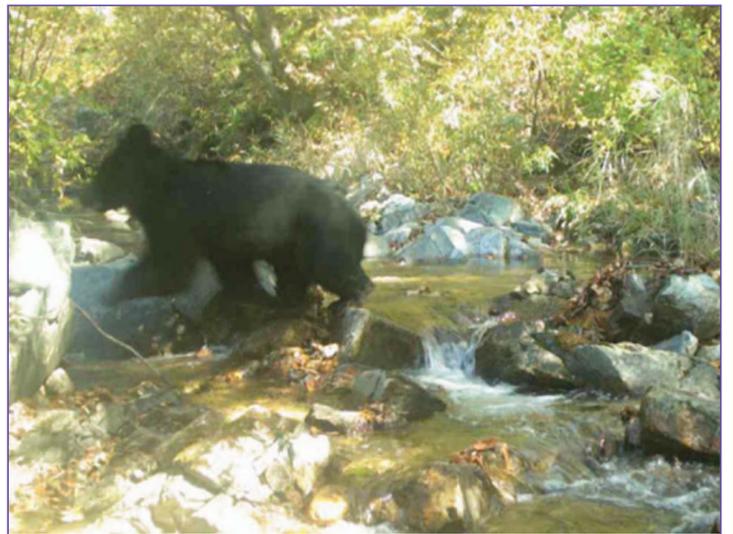
사육곰 개체수 추이



한편 사육곰은 지난 1981년부터 1989년까지 농가에서 수입 증대 목적으로 수입한 이후, 지난 40여년 동안 국제적으로 곰의 응답 채취를 위한 사적 이용, 열악한 사육환경과 확대 방치, 연례적 불법 증식과 곰 탈출 등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진 바 있다.

국제 동물보호단체는 1994년~1997년 한국을 멸종위기 동식물 비보호국으로 선정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에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두수 기자 kienews@naver.com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반달가슴곰 비무장지대 동부지역 서식 확인

비무장지대(DMZ) 동부지역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반달가슴곰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의 무인센서카메라 촬영 자료 분석 결과 DMZ 동부지역에서 반달가슴곰의 서식을 2년 연속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립생태원은 2014년부터 군부대와와의 협력을 통해 DMZ에 무인센서카메라로 야생동물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 중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4월 16일에 반달가슴곰 성체 1마리를 처음 포착했다.

다음 달인 5월 29일에는 5.6km 떨어진 다른 곳에서 성체 1마리를 또 확인했다.

2021년 4월 21일, 6월 1일, 8월 21일에는 또 다른 곳에서 동일한 반달가슴곰으로 추정되는 성체 1마리가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에 앞서 2018년 10월 12일에도 서서

8~9개월 반달가슴곰이 포착된 바 있다.

국립생태원은 이 개체와 2021년도의 성체가 동일한 자는 불분명하지만 반달가슴곰이 행정구역을 넘나들며 DMZ 일대에 서식하고 판단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확인된 DMZ 일대 개체들이 복원이나 사육된 개체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반달가슴곰이 야생 개체인지 여부는 전문가와 군 관계자 등의 논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확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반달가슴곰은 1998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2011년 지리산 일대 5마리를 시작으로, 현재 지리산·덕유산·수도권 등에서 70여 마리까지 복원사업을 확대 진행 중이다.

/정두수 기자 kienews@naver.com

새로운 미래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생각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 융합되는
환경 친화적인 건설문화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축적된 기술로 새로운 공법을 추구하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6천여 회원사는
투명경쟁과 준법수주를 지향합니다.



호주 코알라 멸종위기종 분류

가뭄과 산불·질병 등으로 개체수 감소하고 있어

호주의 장기간 가뭄과 산불, 질병 등으로 인해 급격히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코알라가 멸종위기종으로 공식 분류됐다.

수산 레이 호주환경부 장관은 준주, 뉴사우스웨일스, 퀸즐랜드에서 코알라 개체 수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해외 언론 등은 10일 밝혔다.

코알라 개체수 감소는 지난 20년 동안 장기간 가뭄과 산불·질병·도시화로 인한 서식지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특히 '검은 여름'이라고 불리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호주 동부에서 발생한 산불로 약 6만 마리가 죽었다.

멸종위기종 과학위원회가 추천한 바에 따르면 코알라의 개체수는 2011년 18만5000마리에서 2021

년 9만2000마리로 급감했다.

2050년에는 동부 해안지역에 코알라가 멸종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10년 전에 호주는 동부 지역 해안의 코알라들을 취약종으로 분류한 바 있다.

세계자연기금(WWF)의 과학자 스텔러트 블랜치는 "코알라들이 10년만에 취약종으로 분류됐으며 이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것"이라며 "코알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과 토지 소유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 하는 등의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코알라 멸종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도 호주 정부에 '방산·주택 단지·농업·벌목을 위해 코알라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두수 기자 kienews@naver.com